

여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끝없는 평행선’

국회 정개특위 첫 소위...결론 못낸채 14일 재논의

새누리 “위헌 소지” 민주당 “대선 공약” 입씨름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오후 첫 소위원회를 열어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4일 오전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첫 소위에서도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유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하며 맞섰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정당 공

천을 폐지해도 가령 국회의원이 어느 특정 후보자를 미는 것에 대해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나마 후보자에 대해 필터링 할 기능이 없어, 혼탁선거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특히 후보자의 정당표지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고, 당적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지난 공천회 당시 한 전문가가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 공약은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적 오발탄이라고 지적했다”며 “정치권에서 오발탄을 자꾸 날리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오늘 안건 6건 중 5건이 정당공천을 폐지하지는 내용을 담은 새누리당 안건

이라며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정권을 다시 잡으니 정당공천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은 “당론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대선공약”이라며 “새누리당이 당론 변경 과정도 없이 마치 최고의 당론이 변경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의원들의 밀실, 돈 정치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시·군은 정당공천을 유지하고 정치와 가장 무관한 교육감 선거는 리빙메이트를 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가세했다.

앞서 여야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나란히 출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총장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대해 “각계의 학자들이 이구동성 헌법 위반이라고 말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오히려 며칠 전 당내 특위가 제시한 기초회의 폐지안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박 총장은 “새누리당이 기초회의 폐지라는 엉뚱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공천 폐지 대신 엉뚱하게 지방자치 쇄신안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앞뒤가 맞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 정치권 쟁점 부상

박대통령 “규제 풀어줘야”...야·의료계 “영리화 강행” 반발

의료민영화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급부상하려는 조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들어 규제혁파를 통한 의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거듭 밝힌 데 대해 야당과 보건 의료계는 ‘의료 민영화’의 전초 단계로 규정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의료와 관계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보건 의료료를 비롯한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의료 분야의 규제혁파를 강조한 것은 보건 의료 산업을 미래형 기술·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의료 서비스 활성화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IT(정보기술) 기기로 멀리 떨어진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 의료계는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前) 단계로 결국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하고 중소병원은 고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총과업을 원칙적으로 결의하고 오는 11일 출정식을 통해 파업 방식과 규모,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박 대통령이 의료 영리화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의료 규제 해소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당에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은 사회적 논의를 생략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밀어붙이는 설익은 정책이자, 국민 생명과 보건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면 전면적 반대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무소속 의원(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위원장단이 8일 대구 중구 남일동의 한 카페에서 새정추 대구광역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역사교과서’ 정면 충돌

“국정 환원” “유신 회귀”

여야가 8일 역사교과서 국정 체제로 환원하는 주장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교육부 산하 위원회가 저술해 인정한 국정 단일 교과서 체제로의 복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역사 교육을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현행 검정용 교과서는 민간에서 제작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심사에 합격해 교과서로 정식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논란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 표가 지난 7일 방송 인터뷰에서 “당 내에서 (국정 교과서 환원과 관련한) 얘기가 나온다”고 말한 데 이어, 최경환 원내대표가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외곡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

을 통해 “교과사 교과서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거부당하자 엉뚱하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국가·선진국가에서 국정 교과서로 국사를 가르치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교육부가 ‘일부 학교에서 교과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일방적 매도 등 위압이 있었다’며 특별조사에 들어간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과사 교과서 채택과정에 있었던 학교장 등의 위압 논란 때는 가만히 있다가 교육주체들의 자발적인 요구에 따라 교과사 교과서 선정을 철회한 것을 위압 운운하며 조사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며 “위압은 교육부의 특별조사가 바로 위압이고, 특별조사도 선정을 철회한 학교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교과사 교과서 구하기에 집착하고 있는 교육부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영호남 독과점 정치 깨야”

‘輿안방’ 대구 방문 ‘새정추’ 설명회

봉하마을 故 노무현 전대통령 묘역 참배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영남과 호남의 양대 정치 독과점 지역주의를 바꾸는 게 시대의 요구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대구 중구 미도빌딩에서 열린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대구 설명회’에 참석해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득권의 안주를 대구시민들이 꾸짖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구에서 새정치의 장이 펼쳐지길 바라고 새정치가 말로 합리적인 개혁과 통합을 하라는 국민의 바람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는 새정치와 대립하는 단어가 아니다. 보수는 진보와 함께 새정치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보수 성향인 대구시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그는 “이제까지 대구 주류 정치세력은 대구의 자부심인 보수성을 왜곡했다”며 “낙후한 보수가 대구의 모습인 척 행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에서 경쟁이 없으면 국민의 뜻에 책임질 일이 없다”며 “그간 대구·경북 정치는 공천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됐기에 지역발전이 제대로 될 리 만무했다”고 덧붙였다.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 논의는 선

거를 앞두고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지방선거를 끝낸 뒤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지역후보를 낼 것이냐는 질문에 안 의원은 “자격이 되는 분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때 대구와 경북의 지방선거 후보를 내겠다”고 했다.

또 운여준 새정추 의장은 “대구와 경북처럼 중요한 지역에 지방선거 후보를 안낼 수가 없다”며 “6월 선거에 맞추러면 최소 3월에는 창당해야 하므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후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연합뉴스

박지원 “안신당 속도 늦어 지지율 추락”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8일 “대장장이라도 쇠가 달귀질 때 내려치는 재주가 있는데 우리 민주당은 쇠가 식으면 치고, 안철수 의원은 물 속에 들어가면 친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안철수 신당’의 창당 시기를 속도에 비유하면서 “항상 한 번, 두 번이 늦은 게 아니라 세 번, 다섯 번 정도는 늦게 시작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당 창당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애매모호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창당할지 모르겠다”면서 “안 의원이 지금 여야 차기 대권후보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니 50% 지지를 받던 것이 현재 27~

28%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의 지지가 민주당을 앞서는 것과 관련해서도 “실체는 없고 현상만 있는 안철수의 새정치, 신당에 대한 동경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과연 선거까지 이어질지 지극히 의문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안 의원이 호남에 와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인 부산과 영남 등 야권 취약 지역에 가서 싸워 이겨오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거기는 보지 않고 호남에 와서 싸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정상 매매

1.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13층, 53평

전체 올수리, 코너, 전망 좋음
시세/분양가, 2억원 정도
매매가, 1억 5,500만원

2.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1층 상가, 25평

현재, 편의점 임대중
(보 3천에 월125만원)
시세/분양가, 2억5천만원 정도
매매가, 1억 7,500만원

경매투자

1. 특수비법 배우실 분!
배우면서 투자가능
교육비 1,200만원
2.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수익률 연20% 보장
투자금 3억원 이상
3.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컴퓨터등 집기 제공
연회비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